한전 매각추진… 혁신도시 '껍데기'만 오나

본사 안 온다면 지역민 우롱 처사

싱가포르 방식 도입 … 상반기중 확정

"지방경제 고려 신중 접근을" 한목소리

기획예산처가 한전 및 자회사의 분할 매각을 통한 민영화 계획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핵심인 한전과 한전 KDN,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의 본사 이전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업의 본사 이전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본사 이전을 결정하면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이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한전 및 자회사의 본사 직원이 2천100여명에 이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인구유입 효과는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수위의 한전 및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 방침이 흘러나오면서 타 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남동발전 등 한전 자회사의 본사 이전 계획이 잡힌 부산, 울산 등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거론되면서 본사가 이전할 경남과 전북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고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 및 자회사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 정계나 관계에서는 한전 및 자회사의 민영화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시장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아 인수할 기업도 마땅치 않는데다 민영화는 전력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전의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노무현 정부에서 보류됐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인이 공기업 민영화에 상당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분할 매각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 일각에서는 한전 등 공공기관 민영화는 싱가포르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는 반면 경영은 사실상 민영화 체제를 도입,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흔들지 않고도 실질적인 민영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민영화 정책 골간이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을 민영으로 돌리는데 있는 만큼 혁신도시로의 한전 본사 이전이 물건너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전의 민영화 검토 논란과 관련,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기관, 방법 등에 대한 것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올 상반기 중에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안군 지도면 어의도 김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타르 덩어리를 떼어내고 있다.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유입된 타르 덩어리로 인해 전남지역 수산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타르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맨손어업' 증거 확보 어려워 보상 미지수

수산물 생산 타지역 비해 월등… 태안보다 피해 규모 커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발생한 타르로 인한 전남지역 수산 피해가 1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해안에서 생산되는 김은 전국 생산량의 70%에 달하는 등 각종 수산물의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기름이 직접 유출된 태안 보다 오히려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청에서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피해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7일부터 각 지역별 어촌계와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피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수산피해 대책위원회'는 7일부터 양식 어민들로부터 타르로 인해 발생한 각 지역별 수산 양식시설 피해 상황을 접수하며, 보상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시달하고 있다.

양식 어민들은 피해 접수 과정에서 양식시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해 접수가 완료되면 피해대책위원회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제3의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 정확한 피해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가해 선박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피해가 극심한 신안과 무안 등 2만3천여h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김 채취가 수작업이 아닌 기계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김발에 미세한 양의 타르가 붙더라도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피해 규모가 막대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과 보험회사 조사 내용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 어민들의 주장이 제대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보상 절차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가해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어민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피해어민 중 상당수에 달하는 '맨손 어업'(굴·조개 등 채취)과 '무자료 어업'에 대한 보상 여부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입증 책임이 어민들에게 있으나 '맨손 어업'의 경우 객관적인 피해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 보상을 받을 지 미지수다.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당시 피해 규모와 관련, 어민들의 집계는 2천200억원에 달했으나 보험사가 최종 지급하기로 한 액수는 26% 수준인 580억원이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당수 주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었다.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맨손 어업을 비롯한 피해 어민들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명박 시대' 지역현안·공약 점검

❹공동혁신도시 차질없는 추진

실패한 정책 간주땐 기업이전 동력 상실

사업 규모·지원 등 바꿀 가능성 솔솔

균형발전 추진 '차별화된 모델' 제시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주에 들어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혁신도시 사업은 이미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단위에서 사업 착공이 이뤄진 만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지속적인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한국전력 및 한전 관련 3개사의 민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도에 비상에 걸린 상태다.

더욱이 혁신도시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최대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노 정권의 지방분권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점에 비춰보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여기에 만일 한전이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될 경우, 현 상태에서도 지방 이전을 꺼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나주로의 이전은 물 건너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전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는 일반 공기업 10여개 이상의 이전과 맞먹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한전 매각이 실현될 경우 공동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광주시와 전남도는 양 지역 상생차원에서 혁신도시를 하나로 묶어 조성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타격(?)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해 7월 선거운동을 위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찾은 자리에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당선인이 유권자들의 표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과 지방분권정책을 실패작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규모나 세부 계획, 추후 지원 등에서 변화를 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제 시·도는 이 당선인이 광주·전남 8대 프로젝트에 '나주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 메카 등 특성화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넣은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이 당선인측은 공동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3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오는 점을 감안,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공동혁신도시를 에너지 산업도시로 특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시·도는 이 당선인의 '혁신도시→에너지 메카 조성'이라는 공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동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지역의 논리를 개발·강화해야 한다. 이 당선인이 제시한 혁신도시 조성 방향과 시·도가 구상중인 조성 방안이 유사한 만큼 다른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해 정부가 수용토록 해야 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